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5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4.03.-2025.04.09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6
	■ 중국	
	- 프로그램형 거래 규범 강화로 시장 투명성 제고	6
	- 상하이, 26개 조치로 민영경제 고도성장 추진	6
	- 대미 수입품 34% 관세 부과, 무역 갈등 심화 우려	7
	- 광저우 총화, '공간·항공 경제' 발전 추진	8
	- 생태환경 모니터링, 디지털 전환 속도, 무인화·지능화 실현	8
	- 수소에너지 산업 전반 협력 본격화...미래 성장 경로 확립	9
	- 저공역 공역관리 강화, 드론·通航(통용항공) 발전 지원	9
	- 베이징, 혁신 의약분야 32개 신규 지원책 발표	10
	- 난징, 로봇산업 집적지 도약, 인형(人形) 로봇도 주목	10
	■ 일본	
	- 미야기현 숙박세 도입, 2026년 봄으로 연기 요청	11
	- 미에현 숲에서 이산화탄소 상쇄, 지역 기업 참여로 임업 활성화	11
	- 규슈·오키나와, 전년 대비 파산 20% 증가...물가 상승 영향	12
	- 홋카이도 기업, 인력 부족 심화, 운수·건설 분야 두드러져	12
	- 홋카이도 풍력발전 계획 축소, 생태계 우려로 10기 중 5기 철회	12

- 아이넷, 에이앤에이 상사와 협력...인공위성 부품 대량 생산 추진	13
- 나가노현, 관광 데이터 활용 마케팅...스키장부터 시범 적용	13
- 오키나와 우루마의 모즈쿠, 디지털 전환으로 안정 생산, 조기 수확 상품화	14
- 후쿠이현 아와라시, 온천 료칸 데이터 공유로 지역 재생 시동	14
- 일본 최초 수소연료 전동 자전거, 야마나시현 고후시서 대여 개시	15
■ 싱가포르	
- 불확실성 속 협력 강화 나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15
- 상승폭 둔화 조짐 보이는 싱가포르 주택시장	16
- 싱가포르, 미국과 10% 관세 협상 예정	16
■ 태국	
- 미국의 36% 관세에 맞선 태국, 무역 협상 추진	17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미국의 24% 관세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제안	17
■ 베트남	
- 베트남, 중국·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 시행	18
- 베트남, '디지털 시대 기업과 함께' 엑스포 2025 개막	18
- 베트남·일본, 남부 해역서 25년 석유·가스 탐사 협력	19
- 베트남 제조업, 중국의 투자를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19
-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설립 본격화, 호찌민시·다낭시 개발 추진	20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상하이증권거래소가 프로그램형 거래 세칙을 발표해 고빈도 거래와 보고 절차 규범화로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계획, 프로그램 거래 리스크 억제와 공정성 제고에 주력
- ✓ 상하이가 26개 조치로 민영기업 혁신과 개방을 지원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민영경제 고도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 민영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해 성장 동력 확보를 유도하는 분위기
- ✓ 중국이 미국산 전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해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중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하는 상황, 무역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공급망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추세
- ✓ 광저우 총화구가 액체 발사체 엔진 시험 등 우주항공 산업 육성으로 ‘공간·항공 경제’ 전진기지로 도약을 추진하는 계획, 우주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첨단산업을 동시에 활성화 추진
- ✓ 중국 생태환경부가 모니터링 무인화·지능화를 추진해 대기·수질 자동 운영과 생물다양성 감지 효율을 제고 계획, 무인 장비와 AI 기술을 접목해 환경 관측 정확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기조
- ✓ 중국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와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에 주력해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수소 산업 육성 계획,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와 산업구조 개선으로 탈탄소 전환 추진
- ✓ 중앙공역관리위원회가 저공역 활용 지침을 발표해 드론·통용항공 운항 안전을 정비하고 저공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 기관들이 통합 관제를 통해 안전성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침

- ✓ 베이징시가 혁신 의약 32개 지원책으로 임상시험 간소화와 AI 활용 신약 개발을 독려해 의료기술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목표로 설정, 임상 단계 단축과 지적재산권 보호로 제약·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
- ✓ 난징시가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해 산업·서비스·인형 로봇을 육성하고 국가 로봇 기술 허브로 성장하려는 계획, 산업 협력단과 연구 기관이 연계해 로봇 핵심 부품 자립도 강화

○ 일본

- ✓ 미야기현 료칸 조합이 숙박세 시행 시점을 2026년 봄 이후로 연기해달라 요청해 현·시가 업계 혼란과 성수기 부담을 조정하는 상황, 숙박 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찰을 빚으며 도입 시기 재검토가 불가피한 양상
- ✓ 미에현이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해 기업에 판매하는 J-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며 임업 발전과 탄소 상쇄를 병행하는 실정, 기업 투자를 통해 산림 보전과 이산화탄소 흡수 확대를 병행하는 효과가 기대
- ✓ 큐슈·오키나와 지역 파산이 전년 대비 20% 늘어나 물가와 대출 부담 속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양상, 소비 심리 위축과 비용 상승이 겹쳐 중 소형 기업의 생존 환경이 악화되는 흐름
- ✓ 홋카이도 기업들이 인력 부족 지수 최저 수준을 보이며 운수·건설업 중심 구인난과 임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추세,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 유출이 심화돼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 ✓ 오사카가스 자회사가 홋카이도 풍력발전 계획을 절반 축소해 멸종위기종 보호와 탄소중립 목표 간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 환경부와 협의해 생태 보전 조치와 재생에너지 확대 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기조
- ✓ 아이넷이 에이앤에이 상사와 위성 부품 대량생산에 협력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물류망을 구축하며 우주산업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는 계획, 온라인 거래 기반을 확장해 우주 부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 창출을 모색하는 전략

- ✓ 나가노현 관광기구가 스키 리프트권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을 고도화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 방문객 분석을 기반으로 식음료·액티비티 결합 상품 개발 추진
- ✓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승련어협이 디지털 기술로 모즈쿠 양식을 체계화해 수확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수확 상품화 추진, 양식 기술 고도화와 물류 효율화로 어가 소득 증대와 상품 다양화 모색
- ✓ 후쿠이현 아와라시 료칸 협동조합이 숙박객 데이터를 공유해 가격·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온천지 브랜드 강화, 온천 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숙박 환경 개선과 지역 문화 콘텐츠 강화도 검토
- ✓ 야마나시현 고후시가 수소연료전지 전동 자전거 대여를 시작해 관광 편의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 싱가포르

- ✓ 싱가포르의 로렌스 워그 총리와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가 아세안 결속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과 불확실성 대응을 강화하려는 의지, 양국은 역내 협력을 확대해 교역·투자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
- ✓ 싱가포르 국가개발부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를 발표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중고 거래 축소로 시장 안정을 꾀하는 상황, HDB와 민간 주택 모두 공급 물량 조절로 가격 상승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기조
- ✓ 싱가포르 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10%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하되 보복 대신 협상을 택해 기업 부담 최소화를 모색하는 입장,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 혼란 최소화 기대

○ 태국

- ✓ 태국 총리가 미국의 36%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가격 경쟁력 손실을 막으려는 태도, 기업 활동 위축 방지와 외자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중소기업협회가 미국의 24% 관세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율 제고로 무역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침, 원자재 수급 구조를 점검하며 국제 교역에서의 경쟁력 유지

○ 베트남

- ✓ 베트남 통상산업부가 중국·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 철강 업계가 안도하면서도 수입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
- ✓ 베트남 국제무역박람회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술 교류를 강조하며 수출 확대와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촉진하고자 개최, 거래 플랫폼을 온라인화해 해외 바이어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
- ✓ 베트남 정부가 일본 JVPC·PVEP와 남부 해역 석유·가스 탐사 계약을 체결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협력을 확대할 계획, 해양 자원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 추진
- ✓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첨단 제조 투자를 늘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현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 동남아 제조 허브로 급부상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이끄는 전망

- ✓ 베트남 재무부가 호찌민시·다낭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해 글로벌 자본 유치와 금융산업 성장 추진, 금융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 제도를 병행해 국제 자본 흐름을 안정화하려는 목표로 설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프로그램형 거래 규범 강화로 시장 투명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증권거래소(이하 상증소)가 프로그램형 거래 관리 실시 세칙 발표, 프로그램형 거래의 보고·행위·정보시스템·고빈도 거래 등에 관한 기준 구체화 진행. 여러 차례 의견 수렴으로 공정성과 리스크 억제 강화, 투자자 보호와 규범화된 시장 조성 유도, 상증소의 적극적 제도 시행 강조 - 해당 세칙은 경내외 투자자와 시장 기관 의견을 토대로 보완, 기존 프로그램형 거래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 보고 절차 간소화와 정보 공유 체계 개선 추진. 다양한 투자 주체 간 형평성 및 보고 방식 일원화 목표, 상증소의 후속 교육과 설명 통해 시장 참여자 이해도 제고, 경내외 자금 유입 시 프로그램형 거래 준수 의무 안내 계획 - 세칙과 함께 발표된 '沪股通(후구통) 투자자 프로그램형 거래 보고' 지침도 주목. 홍콩거래소와 협업해 외국인 투자자 보고 체계 정비, 식별코드 사용 통한 거래 추적력 제고. 규범 위반 시 자율관리 조치 적용으로 공정 시장 질서 확보 목표, 상증소는 관련 제도 해설과 교육을 확대, 참여자 이해 제고와 국경 간 감독 효율 증진 모색 <p>○ 상하이, 26개 조치로 민영경제 고도성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가 민영경제 고품질 성장을 위해 26개 구체 조치 발표, 현행 민영기업이 직면한 도전 극복과 성장 환경 개선에 주력. 혁신 역량 강화, 개방 확대, 시장 접근성 제고 등 종합 지원 추진, 민영경제를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계획. 이번 조치는 민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시 당국에 따르면, 민영 규모 이상 공업 총산출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기여도도 높아지는 추세. 첨단기술 기업과 특화 중소기업 비중이 확대되어, 도시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 수행. 이번 조치로 국내외 자본 유치와 혁신 자원 결집 가속, 민영 부문의 지속 성장 기반 강화 기대 - 회의에서는 민영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과 개방형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도 강조. 도시 생산·생활·관리 부문의 주요 장면을 민영기업에 개방, 신기술 검증과 시범 적용 기회 마련. 민영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파견 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등 후속 정책도 예고, 장기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상하이 민영경제 생태계 성장 유도
	<p>○ 대미 수입품 34% 관세 부과, 무역 갈등 심화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025년 4월 10일 낮 12시 1분 부터 미국산 전 수입품에 34% 관세를 추가 부과 공표. 이는 미국 측의 중국 수출품에 대한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응한 반격으로, 국제 무역 규범 위배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지적. 관세 부과 시점 전 출발 물품에는 예외 적용 - 중국은 자국 경제 이익 및 합법적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 표명, 미국의 관세 전략이 상호 협상 없이 강행된 점을 부당하다고 판단. 해당 조치로 미·중 양측 기업과 시장 모두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 무역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 예상 - 전문가들은 양측이 상호 관세를 철회하고 협의 재개를 통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은 평등·존중·호혜 원칙을 강조, 미국에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 단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 충돌이 기업 생산비용과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광저우 총화, ‘공간·항공 경제’ 발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저우 총화구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시설 및 산업 육성 강화. 최근 이 지역에 위치한 중커우항(中科宇航)의 액체 동력 시험센터에서 신형 발사체 엔진 점화 시험을 추진, 차세대 로켓 성능 검증에 중요한 단계 달성 - 총화구는 ‘345’ 지식형 제조업 발전 체계 목표를 설정, 혁신 기업 유치와 양질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집중. 중커우항 프로젝트는 총화가 우주항공과 관련된 핵심 산업을 선점하고, ‘백천만(百千万) 프로젝트’ 실천으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 가하는 사례로 거론 - 향후 중형 액체 발사체 ‘리젠(力箭) 2호’ 개발을 포함한 다수의 항공우주 프로젝트가 총화에서 속도 낼 전망. 우주 기반 운송·위성 기술 등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해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 구축, 저비용 고빈도 우주 접근 역량 확보가 목표. 총화는 중국 상업 우주항공 발전의 선도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p>○ 생태환경 모니터링, 디지털 전환 속도, 무인화·지능화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생태환경부가 ‘국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디지털 전환 방안’ 을 발표, 주요 대기·수질 측정소 무인 자동운영과 수작업 시료채취 지능화 촉진 예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 효율과 데이터 정확도 제고, 대응 속도 향상 - 각종 지능형 감지장치 도입으로 생물다양성 측정 범위 확대, 야생동물 탐지 정확도 향상 추구. 예컨대 적외선 카메라와 음향 분석 기기를 실시간 운용, 포유류·조류·양서류 등 서식 상태 자동 추적 가능. 전체 자동화율 높여 생태계 변화와 환경 문제 조기 파악 - 도심 소음 측정도 진화해 소리원(噪音源)까지 구별하는 수준으로 발전, 도시 기능별 지역 소음 분포 파악 지원. 생태환경부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기술 표준화와 법제 정비를 병행하며, 모니터링 인프라 전면 업데이트와 전국적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으로 환경정책 실효성 증진 목표</p>
	<p>○ 수소에너지 산업 전반 협력 본격화·미래 성장 경로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주요 도시가 수소에너지 전 주기(제조·저장·운송·사용) 산업 육성 전략 가속. 베이징은 수소 인프라 강화와 교통 분야 대규모 적용을 추진, 탄소중립 및 신에너지 혁신 모델 제시. 신장·닝샤 등 지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 잇따라 구축 - 대형 풍력·태양광 설비와 수소제조를 결합한 사례 늘며, 연료 전지차 보급 확대와 산업용 수소 활용 다각화도 동시 전개. 각 지역 정부의 보조금·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촉진, 향후 대규모 상업화 시점 앞당길 전망 - 중국 수소에너지연맹 측은 “수소가 미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 이라 강조, 기술 혁신·인프라 확충·표준 정립이 필수라고 지적. ‘15·5’ (2025~2030년) 기간 동안 수소 산업의 본격적 안정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대형 파이프 라인 수소 운송 실증 등 추가 과제 준비
	<p>○ 저공역 공역관리 강화, 드론·通航(통용항공) 발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공역관리위원회가 저공공역(低空空域) 활용을 위한 새로운 지침 발행, 드론 및 통용항공기 운항 급증에 대응한 안전 체계 정비 주력. 전국 등록 무인항공기 220만 대 넘어선 상황에서, 합리적 공역 배분과 관제 시스템 구축 중요성 부각 - 공역관리 개선은 운항 효율 향상과 동시에 안전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 중점 프로젝트로 무인기 교통관리(UTM) 시스템 구축, 저고도 레이더·통신 장비 투자 확대 계획. 다기관 협업 모델 채택으로 군·민 항공자원 공유와 상호 지원 촉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통용항공과 드론의 물류·관광·농업 등 분야 활용 범위가 확장될 전망. 중앙공역관리위원회는 저공역 범위·운영 절차 정비와 공역자원 배분의 유연화 방침 강조, 다양한 민간 서비스와 신기술 도입 촉진으로 저공경제 활성화 기대
	<p>○ 베이징, 혁신 의약분야 32개 신규 지원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시 의료보장국 등 아홉 개 부처가 공동으로 ‘2025년 혁신 의약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 발표, 총 32개 조치 제시. 임상시험 간소화, 병원 약품 목록 직입(直入), 인공지능(AI) 활용한 신약 개발 촉진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 - 정부는 임상시험 프로젝트의 승인 소요 기간을 20주 이하로 단축, 제도 측면에서 혁신적 치료기술의 현장 투입을 높일 계획. AI 기반 병리 분석과 제약 분야 모델 개발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 - 500억 위안 규모의 의약산업 펀드 조성 등 금융 지원 방안 함께 언급, 중소 혁신기업도 성장 자금 확보 용이. 해당 조치로 베이징은 의약 혁신 생태계 확립과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중심지 도약 의도, 의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도 제고 기대
	<p>○ 난징, 로봇산업 집적지 도약, 인형(人形) 로봇도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징시가 ‘로봇 산업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2024~2026년)’ 발표, 산업용·특수용·인형(人形) 로봇 등 제품 개발과 규모 확장에 주력. 제조 분야 혁신과 도시 서비스 자동화를 결합해 국가적 로봇 기술 허브로 도약 목표 - 지역 대표 기업 에스턴(EFORT)은 로봇 제어기·서보시스템 등 핵심 부품 자립도를 90% 이상 확보, 산업 사슬 전반에서 기술 경쟁력 보유. 난징시는 프로젝트 투자와 기업 인큐베이팅을 지원, 업·다운스트림 기업 유치로 로봇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속 - 물류·카페·의료 등 일상 서비스 분야에 로봇 적용 사례 증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인형 로봇이 새로운 주목 대상으로 떠오르며, 도시가 실증 테스트 환경 제공. 지능형 센서·머신비전 등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로봇 설계와 생산 촉진, 난징을 로봇 산업 대표 도시로 성장 유도</p>
일본	<p>○ 미야기현 숙박세 도입, 2026년 봄으로 연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야기현과 센다이시가 2025년 11월경부터 계획한 숙박세 도입 시기에 대해, 지역 료칸 조합이 2026년 봄 이후로 늦출 것을 강력 요구.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한 혼란 우려와 가을 성수기 부담이 주요 이유로 거론 - 현지 업계는 숙박세 부과 시스템 구축에 최소 1년 이상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인력 부족 상황에서 단풍철과 시기가 겹치면 운영 혼란 가중 우려. 이에 미야기현 지사가 징수 개시 시점 연기를 시사하며 센다이시와 협의 중 -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시의회가 이미 조례를 가결했지만, 실제 징수 개시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업계는 제도 정착과 고객 편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 확보 필요 강조 <p>○ 미에현 숲에서 이산화탄소 상쇄, 지역 기업 참여로 임업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에현이 숲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인증하는 J-크레딧 활용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과 임업 단체 간 매칭 행사 개최. 기업은 배출량 상쇄와 사회 공헌 결합 기회를 모색, 임업 측은 인증 판매로 재투자 기반 확보 - 임업 경영체들은 프로젝트 등록과 인증 절차에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지적하며 지원책 강조. 인공림 비율이 높은 미에현 특성을 살려, 스토리텔링과 지역성을 결합한 새로운 크레딧 시장 확대 목표 - J-크레딧 거래는 도쿄증권거래소에서도 가능하지만, 현 내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지면 자금이 지역에 환원되어 임업 발전과 기업의 탄소 저감이 양립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 기업 모집 시 신청 폭주로 높은 관심 증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큐슈·오키나와, 전년 대비 파산 20% 증가·물가 상승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회계연도 큐슈·오키나와 지역 파산 건수가 전년 대비 20% 늘어난 908건으로 집계. 제로제로 용자(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물가 상승 부담까지 겹쳐 도산 증가 현상 가속 - 업종별로는 중고차 판매 등 소매업의 증가폭이 두드러져 전년 보다 59% 급증. 음식점, 의료·복지 등 서비스업도 도산 사례가 늘어, 원자재·연료비 상승분을 전가하기 어려운 현실 노출 - 부채 총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해 1299억 엔에 달하고, 코로나19 관련 도산은 누적 1295건 돌파. 영세 사업체 중심으로 물가 상승 충격에 대응할 여력 부족, 하청 구조 속 가격 전가 난항 등 위기 심화
	<p>○ 홋카이도 기업, 인력 부족 심화, 운수·건설 분야 두드러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양은행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홋카이도 기업 인력 부족 지수(DI)가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59로, 1989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 유지. 제조·비제조 전 업종에서 인력난 계속 - 운수업은 -81, 건설업은 -70으로 특히 부족감이 두드러짐. 일부 업체는 고령화로 인한 퇴직 증가와 초기 임금 상승 압박을 호소, 향후 사업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 - 물가 상승 비용 전가율을 조사한 결과, 운수업은 절반 수준에 그쳐 전년 대비 크게 감소. 기업 90%가 임금 인상(또는 예정) 계획을 밝히며 평균 연봉 인상률 약 3.97% 전망, 인력 확보 경쟁 치열
	<p>○ 홋카이도 풍력발전 계획 축소, 생태계 우려로 10기 중 5기 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가스 자회사가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등지에서 추진 중이던 풍력발전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당초 10기 건설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지역사회가 희귀 조류 서식지 파괴 등을 지적해 5기만 남기는 방안 결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3월 착공, 2028년 4월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도와 환경성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대폭 축소나 계획 재검토를 권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터빈 배치 변경과 가동 시기 재조정 추진 - 풍력발전이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지만, 생태계 영향이 갈등 요인으로 대두. 회사 측은 철저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주변 환경 모니터링 등 대응책을 마련해 사업 지속 의사 표명
	<p>○ 아이넷, 에이앤에이 상사와 협력...인공위성 부품 대량 생산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발사 아이넷이 에이앤에이(ANA) 홀딩스 산하 전일공 상사와 제휴해 인공위성용 우주기기 공동 개발 추진. 주문제작 아닌 대량생산 가능 부품(‘코츠품’)을 목표로, 전자상거래(EC) 플랫폼 구축 계획 - 양사는 부품 선정부터 수입 통관, 조달 업무 일괄 제안을 통해 위성 제작사의 개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지원. 온라인에서 위성 핵심 부품과 시험 데이터 공개, 인공지능(AI) 활용한 최적 부품 조합 추천 등 구상 - 아이넷은 인공위성 운용과 데이터센터 사업 경험을 결합해 위성 운영 자동화 등 우주 분야로 확장. 에이앤에이 상사의 물류 네트워크와 융합 시 항공기 부품 전용 가능성도 연구, 일본 우주산업 공급망 강화 기대
	<p>○ 나가노현, 관광 데이터 활용 마케팅...스키장부터 시범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노현 관광기구가 스키 리프트권 판매 플랫폼 ‘Go NAGANO 스마트패스’ 회원 정보를 지역 사업자 마케팅에 활용 추진. 관광객 체류와 소비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 수익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모색 - 해당 판매 사이트는 지난 시즌 이용자 13만 명을 돌파해, 스키장 이용객의 거주지와 구매 기록 등을 빅데이터로 축적. 일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스키장이 이메일 광고, 리타게팅 광고 활용해 리프트권 판매 매출을 효과적으로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데이터를 통합해 온천 쿠폰, 숙박 예약 시스템 등 다른 지역 서비스와 연동 계획. 향후 지역 민간 사업자 보유 데이터도 결합해 대규모 마케팅 플랫폼 구축, 나가노 전역의 관광 경쟁력 강화 목표
	<p>○ 오키나와 우루마의 모즈쿠, 디지털 전환으로 안정 생산, 조기 수확 상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승련어협이 디지털 기술로 모즈쿠 양식 관리 체계화 추진. 생육 데이터와 양식 그물 이동 기록을 앱으로 수집해, 수확량 예측 정확도 높이고 생산 변동 완화 시도 - 모즈쿠는 천연 포자를 바다에서 채집해 그물에 부착 후 수개월 간 양식, 자주 이동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이 특징. 수온·일조량의 최적 조건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디지털 전환(DX) 통한 노하우 축적 중요 - 어협은 조기 수확한 모즈쿠를 ‘조기 수확’ 상품으로 개발해 차별화 시도. 기존 가공에 부적합하던 초기 단계 수확분을 별도 상품으로 팔아 수익 다각화 도모, 생산자 간 협조로 수확량 증대 가능성도 주목
	<p>○ 후쿠이현 아와라시, 온천 료칸 데이터 공유로 지역 재생 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이현 아와라시 아와라온천의 료칸 협동조합이 숙박객 수, 객단가 등 주요 지표를 오픈데이터로 공유하며 협업 강화. 데이터 기반의 가격 조정과 인력 배치로 관광 경쟁력 제고 목표 - 2024년 현 내 개통된 호쿠리쿠 신칸센 효과로 관광객 증가. 아와라온천은 호화형 숙박 플랜 개발과 올 인클루시브형 서비스 도입 등으로 수도권 수요 늘리며, 최근 숙박객 51만 명 돌파 - 2025년 목표로 전체 투숙객 56만 명 달성, 객단가 4~6% 인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등 지표 설정. 다만 인력 부족 속 지나친 가동률 상승이 서비스 품질 저하 초래 우려, ‘고부가가치 전략’ 으로 온천지 브랜드력 지속 강화 노림</p> <p>○ 일본 최초 수소연료 전동 자전거, 야마나시현 고후시서 대여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마나시현 고후시가 수소연료전지(FC)를 탑재한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를 일반 대여 서비스로 선보여, 국내 첫 사례로 주목. 저압 수소 카트리지 기술 덕분에 고압가스 규제 없이公道 주행 가능 - 시는 명소 주변 역사문화 교류시설을 거점으로 3시간 1000엔, 1일 2000엔에 FC 포함 전동 자전거 15대를 준비. 배터리 자연 방전 문제 없는 수소연료전지 특성 활용해, 약 50km 주행 가능 - 향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 활용 검토, FC 드론 등 수소 소규모 응용 사업과 연계 계획. 지자체 주도의 에너지 전환 실험으로 관광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 동시 추구
싱가포르	<p>○ 불확실성 속 협력 강화 나선 싱가포르·말레이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얀마 지진 피해 등 역내 불안 요인이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로렌스 윈 총리와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 아세안 결속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과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조에 의견 일치를 보이며, 역내 현안을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윈 총리는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 동남아 국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 - 안와르 총리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 파트너들과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하며, 상호 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협의할 뜻을 표명 - 양국 정상은 오는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역내 협력부터 글로벌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아세안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p>○ 상승폭 둔화 조짐 보이는 싱가포르 주택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국가개발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 정부는 HDB 중고 아파트와 민간 주택 모두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 2025년 1분기 중고 아파트 상승률은 1.5%로 최근 5분기 중 최저치를 보였으며, 민간 주택도 거래량이 15% 줄어드는 등 전반적 열기가 주춤. BTO 물량과 잔여 물량 판매 등 정부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해석되며, 수요자 선택 폭이 확대 - 정부는 앞으로 5만 가구 이상의 BTO 물량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도 약 8,500가구까지 늘릴 계획. 전문가들은 보조금 정책과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을 기대하면서도, 중고 시장은 단기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p>○ 싱가포르, 미국과 10% 관세 협상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 킴 용 싱가포르 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 1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기본적으로 상호 무역협정상의 대응 조치가 가능하나, 수입 비용 증가를 우려해 즉각 보복 관세를 자제하기로 결정함 - 싱가포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상할 계획임. 만약 보복성 조치를 강행할 경우 자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모색 중 - 동남아 국가 중 싱가포르는 비교적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역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 2024년 미국의 對싱가포르 무역 흑자가 급증한 점도 주목되며, 두 나라가 상생 관점에서 해법을 찾을지가 관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태국</p>	<p>○ 미국의 36% 관세에 맞선 태국, 무역 협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미국이 태국 제품에 36% 관세를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속히 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밝힘. 이번 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양국 간 무역 흐름과 가격 경쟁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태국 정부는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이 자국 농업, 소비자 물가, 기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 이에 미국 무역 정책 태스크포스와의 교섭 강화를 준비하고, 여러 산업 단체와 협력해 피해 완화 방안을 모색 중 - 태국은 미국과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 구조 개혁, 생산 효율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패통탄 총리는 안정적인 무역 협력과 상호 신뢰 확보가 동남아 경제 전체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
<p style="text-align: center;">말레이시아</p>	<p>○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미국의 24% 관세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중소기업협회 윌리엄 응 회장은 미국의 24%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원자재 조달 경로 확충과 고객 기반 분산을 통해 무역 리스크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 - 협회는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에서 나아가, 말레이시아 기업의 설계·관리가 담긴 ‘메이드 바이 말레이시아’ 로 전환할 것을 권고. 이로써 가치사슬 전반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아세안 회원국 간 연계를 통해 비관세장벽도 완화하자고 제안 - 전자제품, 팜유, 고무, 섬유 등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이 관세 영향권에 들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과 함께, 미국이 인도 제약품에 관세를 면제한 사례를 참고해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등 특정 품목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베트남, 중국·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통상산업부가 중국·한국산 일부 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37.13%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부과 대상 기업과 면제 기업을 구분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수입 구조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 - 중국 바오스틸 잔장, 한국 현대제철 등이 주요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포스코·KG동부제철·동국제강 등은 이번 관세 적용에서 제외. 베트남 당국은 수입량 급증이 자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덤핑 여부와 피해 상황을 추가 조사할 예정 - 지난해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91%나 증가한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 현장 실사와 더불어 기업 의견 수렴을 병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이로 인해 베트남과 해당 수출국 간 무역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
베트남	<p>○ 베트남, '디지털 시대 기업과 함께' 엑스포 2025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회 베트남 국제무역박람회 하노이에서 성대하게 열려, 전 세계 18개국 400여 기업이 참여해 500개 이상의 부스를 운영. '디지털 시대 기업과 함께' 를 주제로, 온라인 B2B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교류가 시도 - 응우옌 신 닛 탄 통상산업부차관은 이번 행사가 수출시장 확대와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디지털 전환, 기술 솔루션, 물류 혁신 등 핵심 트렌드를 선보이며, 참가 기업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가속화 - 알제리, 캄보디아, 한국, 중국 등 여러 국가관이 설치되어 자국의 우수 제품과 서비스 홍보에 주력 베트남 정부는 엑스포를 통해 해외 투자자 유치와 혁신 생태계 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아 무역 중심지로서 입지를 재확인하고자 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베트남·일본, 남부 해역서 25년 석유·가스 탐사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와 일본 베트남석유회사(JVPC), 베트남 석유가스탐사생산공사(PVEP)가 남부 해역 쑤우롱 분지에서 25년에 걸친 석유·가스 탐사 계약을 체결. 이는 베트남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 간 기술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정 - 부이 타잉 썬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의 선진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자원 회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베트남 석유·가스 부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 - 통상산업부 측은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주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 2025년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정부에 있어, 안정적 자원 확보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부상
베트남	<p>○ 베트남 제조업, 중국의 투자를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아 제조업 투자를 확대. 2024년 기준 대(對)베트남 투자액은 약 47억 달러에 달하며, 싱가포르·한국과 함께 베트남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으로 부상 - 투자 분야는 북부 지역의 첨단·정밀 제조부터 남부의 노동집약·대규모 생산까지 다양하게 분산 박장, 하이퐁 등 지역이 전자·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 중이며, 동나이, 빈즈엉 등은 전통적 대규모 공장 유치에 주력 - 베트남 정부의 우호적 정책, 인력 경쟁력, 지리적 이점 등이 외국 기업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투자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현지화 전략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p>○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설립 본격화, 호찌민시·다낭시 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재무부는 국제금융센터(IFC)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제시. 법적 기반과 규제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을 지향 - 핀테크, 블록체인, AI 등 혁신 기술에 대한 적극적 육성과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 추진도 핵심 과제로 선정 이를 위해 국회 결의안을 준비 중이며, 금융 자유화와 ESG 투자를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 검토 - 2024년 말까지 호찌민시에 국제금융센터를, 다낭시에 지역금융 센터를 구축해 FDI 유입과 금융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 호찌민시는 베트남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로, 투자 유망성 측면에서 국내외 자본의 관심이 집중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